## 신당 쇄신위원장 "현역의원 3분의 1 교체하겠다"

# 광주·전남 의원들 '좌불안석'

### 본보 여론조사 56% "물갈이 필요"…의원들 민심다지기 나서

올 총선 물갈이에 대한 당 내외 여론이 고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의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실시한 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호진 쇄신위원장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현 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물갈이 대상으로 당·정·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오만한 행태를 보인 인사들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는 "당·정·청의 고위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륜과 도덕성이 뛰어난 분이 있으니까 흑백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친노 배제를 경계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기준을 적용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4~5명의 현역 의원이 인적 청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대통합민주신당의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현역의원들의 살생부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혁명은 당선 안정권인 호남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인 7~8명 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에서 물갈이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쇄신위와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광주일보의 물갈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일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통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적이 없으며 역대 총선에서 늘 물갈이가 거론됐었다 "며 "특히 지역 언론이 너무 물갈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광주지역 모 의원은 "자꾸 언론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족을 얘기하는데 하루 아침에 초선 의원들이 중진급 이상의 정치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인물을 키운 뒤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물갈이 여론 확산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을 지역구에 상주시키는 등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구를 발로 뛰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 김교흥 의원 등 쇄신위원들이 2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당 쇄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강운태 前 의원 "남구는 정치적 고향" 출마 선언

**정가풍향계**

○…강운태 전 의원이 사실상 18대 총선에서의 광주 남구 출마를 선언.

강 전 의원은 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남구가 많이 침체한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정치를 한다면 18대 총선에서 광주 남구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그는 또 "일부에서는 광주 외의 타 지역구 출마 권유도 하고 있지만 나의 정치적 고향은 광주 남구 단 한 곳"이라며 "지역 여론을 살핀 뒤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선대위 총괄조정실장을 맡았던 정기남 나라비전연구소장이 2일 18대 총선 광주 남구 출마를 선언.

정 실장은 "지난 12년 동안 정 전 의장을 모시고 대권 창출에 나선 바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 5년 후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 방안을 세우겠다"고 주장.

### 정기남씨도 남구 출마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대선 참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핵심 측근 인사들이 총선에 나서는 것은 모양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

### 시·도 선관위 총선 만전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각각 시무식을 갖고 9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18대 총선을 차질없이 치를 것을 다짐.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넉 달도 채 안 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돼 몹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원칙대로 공정하게만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소개.

/홍행기기자 redplan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신당 '孫 합의 추대론' 논란 격화

### 정대철·김한길 "경선하자" 반발…제 3후보론도

'손학규 합의추대론'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과 386 그룹을 중심으로 '손학규 간판론'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한길 의원 등은 경선을 거쳐야만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면적 쇄신을 주장한 초선 의원 15인 그룹은 오는 7일 중앙위에서 표대결을 통해 외부인사 합의추대 등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초선 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최재천, 문병호 의원은 2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고위 권한은 '상임중앙위 구성 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최고위가 상임중앙위 구성을 미루며 당 쇄신, 지도체제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자 무효"라며 "전대 소집이 어려울 경우 중앙위가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한 조항에 따라 중앙위가 당의 진로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 쇄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지도부가 관여하는 한 쇄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중앙위에서 ▲지도부 즉각 사퇴 및 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쇄신안 부결 등을 성사시키겠다며 '세몰이'에 들어갔다. 전체 중앙위원 485명 가운데 162명이 최근 이 같은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초선그룹은 비대위원장 후보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원순 변호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을 상대로 '삼고초려'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주말까지 '적임자'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 쇄신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연합뉴스

## 신당 대선 참패 책임 "나 몰라라"

### 당 중진·원로·386·초선 의원들도 "누가 누구한테 책임 묻나" 반발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아직도 대선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선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당에서 개혁진영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아직도 신당 의원들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초선의원 10여명이 친노세력, 참여정부 시절 총리 및 장관, 당 의장 및 원내대표 출신 등 '살생부'를 제시하는가 하면 중진·원로들의 2선 후퇴 및 '적진(敵陣) 출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김호진 당 쇄신위원장도 "현역 50명 가량은 물갈이돼야 한다"며 외치고 있지만 이에 응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 당사자들의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반발만 있을 뿐이다. '386' 책임론도 거론되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앞길 개척에만 눈이 어두운 상태다.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초선의원들 역시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신 스스로 불출마 등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야 순서가 맞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불출마 선언으로 줄을 잇던 지난 16, 17대 총선 때의 민주당, 한나라당 사례와 비교할 때 신당의 모습은 안이한 정도를 넘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동교동계의 좌장격인 민주당 권노갑 당시 고문은 전격적으로 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물갈이의 신호탄을 쐈다. 권 전 고문은 또 다른 의원들의 '용퇴'를 종용, 국창근·채영석·조홍규·양성철·김충일·조순승 전 의원 등이 줄줄이 불출마했다. 조직위원장으로 공천작업의 실무 총책임을 맡았던 윤철상 전 의원도 순순히 지역구를 내놓을 정도였다.

신당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신당 의원들이 국민이 대선을 통해 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 살길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신당으로서는 30% 가까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이념과 과거 등에 얽매이지 않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4월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법사위 'BBK 특검법' 개정안 상정 무산

### 한나라 "특검법 위헌·부당" 신당 "특검법 무력화 기도"

국회 법사위는 2일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의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차이로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기존 BBK 특검법은 특검 추천기관, 수사대상, 법안 명칭 등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날 오후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당이 개정안은 BBK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며 개정안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성영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특검을 수용키로 한 마당에 폐지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냈지만 특검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는 게 맞다"며 "신당이 주도한 특검법은 이 당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의원은 "특검법은 대선 민의를 거스르는 다수당의 정치적 쿠데타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반면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개정안은 김경준씨 주가조작 의혹 및 횡령과 관련된 사안만 특검에서 다루고, 이명박 당선인 스스로 한 점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 도곡동 땅 실소유 문제까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결국 이는 이명박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